

KREI

농가의 소득구조 및 소비성향 분석

박미선



KREI

농가의 소득구조 및 소비성향 분석

박미선



연구 담당

박미선 | 부연구위원 | 연구 총괄

토의용논문 W60

농가의 소득구조 및 소비성향 분석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3. 5.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크리커뮤니케이션

I S B N | 979-11-6149-639-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농가 후생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변수는 소비라는 전제 아래 농가의 소득과 소비가 어떠한 관계성을 갖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가한 농가소득이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농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 연구는 소득분위별 농가소득과 농가소비의 구조와 추이를 파악하고, 가처분소득 중 총소비지출로 이어지는 비율(평균소비성향) 및 유형별 농가소득 증가에 대한 소비지출의 민감성(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하여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 정책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소비함수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기반으로 농업구조 및 농가소득, 농가소비와 도시가구 소비에 대한 문헌을 세밀하게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농가의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 및 소득분위별·소득유형별 한계소비성향의 결과를 해석한다.

연구 결과

- 2013~2021년 동안 모든 소득분위에서 농가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농가소득의 의존성은 저소득분위 가구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농가소비는

농가소득이 소득분위에 따라 유의미한 격차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1~3분위의 소비지출 규모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5분위 가구의 경우 농가소득의 규모와 구성, 소비지출 규모 면에서 다른 분위와 확연하게 구분된다.

- 같은 기간 동안 농가소득 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총소비지출의 증가를 상회하면서 모든 소득분위에서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였다. 한계소비성향 분석 결과에서는 소득유형별로 한계소비성향이 다르며, 소득분위별로 소비 증가를 유발하는 소득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상대적으로 소득 변동성이 작은 사업외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추정되었으며, 농업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낮게 추정되었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봤을 때, 3분위 가구의 경우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일단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를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며, 한계소비성향 또한 다른 분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 제언

- 가처분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비성향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농가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가 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평균소비성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련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
- 또한 안정적인 소득의 증가가 소비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농가소득 증대가 농가소비 증가-농가 후생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증대 정책과 함께 농가소득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6

제2장 농가소득 및 소비구조의 변화

1. 농가경제조사를 통해 살펴본 농가 특성	15
2. 농가의 소득구조 변화	19
3. 농가의 소비구조 변화	25
4. 소결	32

제3장 농가의 평균소비성향 분석

1. 가처분소득의 변화	37
2. 평균소비성향의 변화	40
3. 소결	43

제4장 농가의 소득유형별 한계소비성향 분석

1. 분석개요	47
2. 분석자료 및 변수	47
3. 분석방법 및 모형	55
4. 분석결과	58
5. 소결	64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69

2. 연구의 한계 71

부록 **73**

제2장

〈표 2-1〉 농가의 가구주 특성 및 가구원 수 규모 16

〈표 2-2〉 농가의 영농 특성 18

〈표 2-3〉 농가소득 유형별 추이 21

〈표 2-4〉 소득분위별 농가소득의 유형별 추이 24

〈표 2-5〉 농가의 총소비지출과 필수재·선택재 소비지출 규모 추이 26

〈표 2-6〉 필수재 항목별 소비지출 규모 추이 27

〈표 2-7〉 선택재 항목별 소비지출 규모 추이 29

〈표 2-8〉 소득분위별 총소비지출 및 필수재·선택재 소비지출 규모 추이 31

제3장

〈표 3-1〉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및 농가소득 추이 38

〈표 3-2〉 평균소비성향 추이 41

〈표 3-3〉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43

제4장

〈표 4-1〉 요약통계량(연도=2013) 51

〈표 4-2〉 총소비지출에 대한 소득유형별 한계소비성향 59

〈표 4-3〉 소득분위에 따른 농가소득 유형별 총소비지출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63

부록

〈부표 1〉 공익증진직불법(2020) 전후의 농업직불제도 73

〈부표 2〉 소득분위별 농가부채 추이	74
〈부표 3〉 소득유형별 필수재·선택재 소비지출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74
〈부표 4〉 소득유형별 적자·흑자 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75
〈부표 5〉 소득분위별·소득유형별 필수재·선택재 소비지출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76

제3장

〈그림 3-1〉 농가의 평균소비성향 회복을 위한 과제 44

제1장

서론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은 농업·농촌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농가소득 증대 혹은 경영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은 결국 소득 증가를 통해 농가 후생을 향상하기 위함임.

- 그러나 개인의 효용이나 사회 후생은 소득보다는 소비와 더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농가 후생 향상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가소득과 농가소비와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함.
 - 향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소득의 변동성이 높은 경우, 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증가한 소득을 소비로 연계하려고 하는 경향이 낮음(김대일, 2007).

- 또한, 현재 시점의 소비는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소득과 자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따라서 현재의 소비가 현재의 소득보다 개인의 효용 및 복지와 더 연계되어 있음(김대일, 2007).
- 농가소득은 시장개방, 기후변화 및 소비자의 농산물 선호도 등과 같은 외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연도별 소득 변동이 심함. 또한, 농가의 주요 생산요소는 토지나 대동물·대식물 등으로 어느 한 시점의 소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¹⁾ 따라서 도시가구에 비해서 특히 농가의 경우 소득보다 소비가 농가의 후생과 더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그간의 연구는 농업구조, 농가소득 구조 분석 및 농가소득 불평등·양극화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으로 ① 농가소비에 대한 구조 분석이나, ② 농가소득-농가소비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은 미미한 수준임.

○ 따라서 본 보고서는 농가소득과 농가소비의 구조와 추이를 파악하고, 농가소득 구성 요소별로 농가의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농가소득 및 농가 후생 증대 방안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1.2. 연구 목적

○ 이 연구를 통해, 농가 후생 증대를 위한 정책이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가의 소득과 소비가 어떠한 관계성을 갖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

¹⁾ 토지 등의 자산은 소비와 영구소득(permanent income)에 영향을 미치나 시점별 소득(current income)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Meyer, B.D. & J.X. Sullivan, 2017).

하다(정선화, 강혜정, 2015)는 것을 전제로, 농가의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가의 인구사회학적 및 영농 관련 특성을 먼저 살펴본 후 이러한 특성에 기반해 소득 및 소비구조와 평균소비성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또한, 소득분위에 따른 소득유형별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 때 농가의 소득과 소비가 함께 증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농업의 규모화·전문화, 농가 소득활동의 다변화로 인해 소득 규모와 유형의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소득분위별·소득유형별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 2장은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연도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구분하고, 소득분위별 농가소득 및 소비구조의 변화를 파악함.
 - 본격적으로 농가소득 및 소비 변화를 파악하기에 앞서 농가경제조사 2017년과 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 전체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을 살펴보았음.
 - 농가소득을 유형별(농업소득,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비경상소득)로 구분하여 약 10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고, 농가 소득 변화에 어떠한 소득이 가장 크게 기여하였는지와 소득분위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함.

- 농가의 총소비지출 변화를 살펴보고, 소비목적별(필수재와 선택재)로 구분한 후 소비목적별 소비지출 변화가 소득분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봄.

○ 3장은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및 평균소비성향의 추이를 분석함.

○ 4장은 농가경제조사 2013년 패널을 이용하여 소득분위에 따른 농가소득 유형별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2.2. 연구 방법

○ 본 보고서는 ① 소비함수 이론에 기반한 농업구조 및 농가소득, 농가소비 및 도시가구 소비에 대한 문헌 검토, ②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한 기본 통계 분석 및 회귀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였음.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1. 농업구조 및 농가소득 관련 연구

○ 김미복, 박성재(2014)는 농업총조사(2000, 2010)와 농가경제조사(2003, 2013)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구조 변화에 따른 농가경제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음.

- 전업농의 감소와 2종 겸업의 확대로 농가소득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

나 여전히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과 격차를 보이고 있어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농업 규모화 정책과 농외소득원 개발 정책이 투트랙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가구주가 60~70대인 농가 중 일정 비율이 절대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함.
- 영세규모 농가(1.0ha 미만)가 아님에도 절대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보이고 있는 농가의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를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새로운 충격에 농가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결 방안으로 농업경영리스크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함.

○ 유찬희 외(2020)는 농가경제조사 2013~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소득수준과 원천별 비율을 이용하여 농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농가의 소득원천별 소득 규모 및 소비지출 규모의 추이 분석을 통해 농가의 이행 경로(소득 활동 방법과 지출 규모의 결정)를 분석하였음.

- 농가 유형을 ① “소득작목을 중심으로 전문화되어 있고 규모화를 피하는 농가’(유형 1)”, ② “농외소득에 주로 의존하고 향후 영농 확대 가능성이 낮은 농가’(유형 2)”, ③ “영농 규모와 가계 지출을 함께 줄여 균형을 맞추는 농가’(유형 3, 4)”로 구분함.
- 유형 1의 농가 중 57.4%는 농업 수익을 다시 농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지만(주로 축산농가와 논벼농가) 42.6%는 농업소득의 감소를 경험하였음(주로 채소농가). 이러한 유형의 농가는 생산과 시장(농산물 시장 및 인력 고용 시장) 측면의 위협에 모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① 농가 경영안정과 투자를 위한 지원 확충, ② 농가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유형 2의 농가는 농업외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농촌 내의 지역 경제 및 노동 시장에 민감할 수 있음. 따라서 농촌지역 내의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는 정책과 농가 가구원이 지역 노동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적자본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유형 3과 4인 농가의 경우는 고령화에, 농업 규모가 작고, 향후에도 경지 규모를 확대할 의향도 낮아 농업 및 농업외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정책이 아닌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3.2. 농가소비 관련 연구

○ 김성용, 이계임(2002)은 농가 평균소비성향 분석, 도시가구와 농가의 소비지출구조 비교분석, 농가유형별 소비지출 차이 분석,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도출 및 농가 소비 결정요인 파악을 통해 농가소비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선택재 등에 대한 지출 비율이 증가함을 보이고, 이러한 증가를 농촌생활 질의 전반적인 향상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함. ②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는 소득 불균등도보다 안정적이며,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불균등도보다 낮음. ③ 농가 소비함수를 추정함으로써 농가소비는 당시 소득수준, 농가의 순자산 변동, 가구원 수, 가구주 학력, 전업 여부 등에 유의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밝힘.

○ 정선화, 강혜정(2015)은 농가경제조사 2008~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

소득원별·소비계층별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하고, 농가의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원별·소비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힘.

- 고정효과모형과 소비계층별 분위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 ① 모든 소비계층에서 농업외소득(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② 농업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다른 소득에 비해 낮게 추정되었고, ③ 하위 10% 소비계층에서 농업소득보다 이전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음을 보임.
- 정책적 시사점으로 ①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외소득 증대 정책 마련, ② 소비 빈곤층을 위한 이전소득의 증대 및 소비 안정화 정책 수립, ③ 농업소득의 낮은 한계소비성향은 농업소득의 큰 변동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농업소득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영비 안정 대책 마련 등을 제시하였음.

○ Sand, R.(2002)는 258개 노르웨이 농가의 1976~1997년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소득원천별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하였음.

- 주요 결과로 ① LCP 모델(Life Cycle and Permanent Income Model)²⁾은 노르웨이 농가의 소비-저축 행태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② 노르웨이 농가의 한계소비성향은 비교적 낮지만 미국이나 네덜란드 농가의 한계소비성향에 비해서는 높으며, ③ 농업외소득(off-farm income)의 한계소비성향이 농업소득(farm income)의 한계소비성향보다 높다는 것을 도출함.
- 세 번째 결과는 변동성이 큰 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안정적인 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낮다는 항상소득가설에 기반한 소비이론의 정형화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²⁾ LCP 모델은 Ando, Brumberg & Modigliani가 제안한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과 밀턴 프리드먼(1957)이 주장한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기반하여 소비와 저축 행태를 설명하려는 모델임(Sand, R., 2002).

3.3. 도시가구 소비 관련 연구

○ 장인성(2019)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년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평균 및 한계소비성향의 차이를 분석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비 진작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에 미치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추정하였음.

- 균등화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수준별 평균 및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한 결과, 평균 및 한계소비성향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을 발견함.
- 낙수효과 분석 결과, ① 고소득층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저소득층 소득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② 중산층의 소비성향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파급효과를 나타냄. 따라서 소비성향이 높은 중간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해당 집단의 소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승수효과를 통해 국가 전체의 인적자본 축적을 높일 수 있음.

○ 노용환(2021)은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고, 시나리오 접근법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기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한 정부의 이전지출이 얼마만큼의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현금지원 효과는 평균적으로 지원액의 19.2%로 추정되었으며, ② 이전소득 지원을 통한 소비증대 효과는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 더욱 컸고, ③ 금융자산은 소비에 있어서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작용하고, 가계부채는 가계에 유동성 공급함으로써 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①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② 특히 소비를 통한 가계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와 함께 노인가구나 은퇴가구, 금융자산이 부족한 가구에 대한 이전지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홍기석, 박소민(2021)은 한국노동패널 4~22차(2001~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세부 집단별 임시소득 충격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음.
 - 실증분석 결과, ①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약 0.23, 임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약 0.15로 계산되었으며, ② 유동성 제약하에 있는 가구, 저소득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높거나 학력이 낮은 가구일수록 소비에 대한 임시소득의 탄력성이 높았음.
 - 한계소비성향은 소비의 소득탄력성과 평균소비성향의 곱으로 구해지는데, 상기에 열거된 가구일수록 평균소비성향 또한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이 가구들의 임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① 항상소득가설이 예측한 것과는 달리, 임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임시소득에만 영향을 주는 일시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②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해당 계층의 후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의 폭을 완만하게 하는 데에도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세부 집단별로 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았음.

3.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① 농가소득 혹은 소비구조 분석에 그치지 않고 농가소득-농가소비 간의 관계성을 규명하려고 했다는 점, ②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농가의 전반적인 소비수준의 변화와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민감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는 점, ③ 분위기를 구분할 때 소비지출 규모가 아닌 가치분소득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제2장

농가소득 및 소비구조의 변화



2

농가소득 및 소비구조의 변화

1. 농가경제조사를 통해 살펴본 농가 특성

- 농가소득 및 소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주는 농가의 가구주 특성 및 가구원 수 규모와 영농 관련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 <표 2-1> 1인 가구를 포함한 농가 특성 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가 중에서 가구주가 70세 이상인 남성이면서 가구원 수는 2명인 농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과 2021년 모두 가구주가 남성인 농가는 약 80%이며, 여성인 농가는 약 2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85.1%였으며, 2021년에는 89.5%까지 증가하였

음. 상대적으로 가구주가 59세 이하인 농가는 2017~2021년 동안에 4.4%p 감소하였음.

- 가구원 수가 2명인 농가가 60.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1인 가구가 많았음. 특히, 1인 가구는 2017~2021년 동안에 3.3%p 증가하였음.

〈표 2-1〉 농가의 가구주 특성 및 가구원 수 규모

단위: %

구분	1인 가구 포함		1인 가구 미포함	
	2017년	2021년	2017년	2021년
가구주 성별 분포				
남성 가구주	80.2	80.1	93.1	94.5
여성 가구주	19.8	19.9	6.9	5.5
가구주 연령별 분포				
49세 이하	3.5	2.2	3.9	2.3
50~59세	11.4	8.3	12.9	10.1
60~69세	31.1	33.6	32.6	35.5
70세 이상	54.0	55.9	50.6	52.1
가구원 수 규모				
1명	17.8	21.1	-	-
2명	60.7	60.5	73.7	76.7
3명	13.3	11.3	16.3	14.3
4명	5.0	5.0	6.1	6.3
5명	2.0	1.3	2.4	1.7
6명 이상	1.2	0.8	1.5	1.0

주: 통계청 MDIS를 통해 이용가능한 농가경제조사 원자료에서 '집계코드'와 '가구원 수' 정보를 모두 이용하여 1인 가구(단독가구)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연도는 2017년부터임. 농가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려면 1인 가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최초 시점인 2017년과 최근 시점인 2021년도의 정보를 이용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1.1%로 상당히 높으며, 2017년에서 비해서 2021년에 1인 가구 비율이 3.3%p 증가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1인 가구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표 2-2〉는 농가의 영농 관련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1인 가구를 포함한 결과를 기준으로, 전체 농가 중 전업농가³⁾의 비율이 가

장 높으며, 그 비율은 2021년에 2017년에 비해서 0.7%p 증가하였음. 겸업농가⁴⁾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적은 2종 겸업농가도 2017년 32.1%에서 2021년 32.8%로 0.7%p 증가함. 그에 반해 1종 겸업농가의 비율은 2017~2021년 동안에 1.3%p 감소함.

- 농가를 주·부업 및 자급농가로 구분할 경우(1인 가구 포함), 2017년 기준 전문농가는 23.2%, 일반농가는 34.1%, 부업농가는 29.2%, 자급농가는 13.5%의 비율을 보임. 2017~2021년 동안 전문농가와 부업농가는 각각 1.2%p와 1.3%p 증가하였고, 일반농가는 2.8%p 감소하였음. 같은 기간 동안 자급농가의 비율 변화는 미미하였음.⁵⁾
- 영농형태별로 살펴봤을 때(1인 가구 포함), 2017년에 채소농가(24.1%)와 논벼농가(2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과수농가(8.8%), 축산농가(5.2%), 특작농가(3.2%) 순서였음. 2021년에 채소농가, 논벼농가, 과수농가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으나 특작농가의 비율은 1.3%p 감소하였고, 축산농가의 비율은 1%p 증가하였음.

3)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를 의미함. 이러한 통계상의 정의로 인해 전업농가에는 “농업경영에 전문화된 규모화된 농가뿐만 아니라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가구까지 포함”되어 있음(오내원, 김은순, 2001).

4)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의미함.

5) 주업농가는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이 농업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를 말하며, 주업농가는 다시 전문농가와 일반농가로 구분됨. 주·부업 및 자급 농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김수석 외, 2006).

- 전문농가: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이 농업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
- 일반농가: 경지규모가 3ha 미만이고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이 농업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
- 부업농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외 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 경지규모가 30a 미만인 농가 중에서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

- 2017년 기준으로(1인 가구 포함), 경지규모가 1ha 미만인 농가가 59.3%로 가장 많았음. 경지규모가 1ha 이상~3ha 미만인 농가는 29.7%, 3ha 이상인 농가는 10.9%로 나타남. 2021년에 경지규모가 1ha 미만인 농가와 3ha 이상인 농가는 각각 2.9%p와 0.3%p 증가하였고, 1ha 이상~3ha 미만인 농가는 3.1%p 감소하였음.

〈표 2-2〉 농가의 영농 특성

단위: %

구분	1인 가구 포함		1인 가구 미포함	
	2017년	2021년	2017년	2021년
전업 및 겸업 농가				
전업농가	54.6	55.3	51.3	53.7
1종겸업	13.3	12.0	12.9	10.5
2종겸업	32.1	32.8	35.9	35.8
주업, 부업 및 자급 농가				
전문농가	23.2	24.4	26.1	27.3
일반농가	34.1	31.3	30.9	28.0
부업농가	29.2	30.5	31.6	33.9
자급농가	13.5	13.8	11.4	10.7
영농형태 ²⁾				
논벼농가	22.0	21.5	21.1	19.7
과수농가	8.8	8.7	9.5	9.1
채소농가	24.1	24.6	21.4	23.0
특작농가	3.2	1.9	2.4	1.5
화훼농가	0.6	0.4	0.5	0.6
전작농가	2.9	2.3	2.3	2.7
축산농가	5.2	6.2	5.6	5.8
기타농가	1.1	1.7	1.4	1.7
경지규모				
1ha 미만	59.3	62.2	54.6	57.9
1ha 이상~3ha 미만	29.7	26.6	33.4	30.4
3ha 이상~5ha 미만	6.0	6.2	6.2	6.4
5ha 이상	4.9	5.0	5.8	5.3

주 1) 통계청 MDIS를 통해 이용가능한 농가경제조사 원자료에서 '집계코드'와 '가구원 수' 정보를 모두 이용하여 1인 가구(단독가구)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연도는 2017년부터임. 농가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려면 1인 가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최초 시점인 2017년과 최근 시점인 2021년도의 정보를 이용함.

2) 나열된 영농형태별 비율과 2종겸업의 비율을 더하면 100%가 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2-1>과 <표 2-2>를 1인 가구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70세 이상인 여성이 가구주로서 1ha 미만인 소규모 농지에 주로 채소나 벼, 특작 및 전작 작물을 심는 자급자족형의 전업농가가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1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남성인 가구주 비율이 약 13~14%p 낮아진다는 점과 70세 이상인 가구주 비율이 약 3~4%p 높아진다는 점으로 보아, 1인 가구의 경우 70세 이상인 여성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전업 및 1종겸업 농가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 전문농가와 부업농가의 비율은 낮아지나 일반농가와 자급농가의 비율은 높아진다는 점, 논벼·채소·특작·전작 농가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특히 채소농가)과 경지규모가 1ha 미만인 농가의 비율이 증가하고 1ha 이상인 농가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1인 가구의 경우 1ha 미만인 소규모 농지에 주로 채소나 벼, 특작 및 전작 작물을 심는 자급자족형의 전업농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2. 농가의 소득구조 변화⁶⁾

2.1. 농가소득 유형별 추이

○ 가구원 수⁷⁾를 이용하여 균등화한 농가소득(소비자물가지수 2020 = 100을

6) 10여 년간의 시점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2013년과 2018년 패널을 사용하였으며, 2013년 패널(2013~2017) 중 4개 연도에는 1인 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연도별 통일성을 위하여 이후의 모든 분석은 2인 이상의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7) 농가경제조사는 가구원 수를 보고하고 있으나 6명 이상부터는 정확한 가구원 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가구원 규모를 2~5명까지로 보고한 가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구원 수를 사용하여 균등화

이용하여 실질화)은 2013~2021년 동안에 총 710만 원 증가하였음.

○ 해당기간 동안 공적이전소득이 552만 원 증가하면서 농가소득 증가에 가장 많은 기여를 제공함.

- 공적이전소득은 2013년 365만 원에서 연평균 증가율 11.7%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 711만 원을 기록하였음. 2020년에는 906만 원으로, 2019년에 비해서 200만 원가량이 더 증가하였음.

- 공적이전소득이 2013~2019년 동안 365만 원 증가했다는 점과 비교해봤을 때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2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임.

- 이러한 증가는 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증진직불법⁸⁾으로 인한 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효과가 이중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⁹⁾

- 공적이전소득 중 농업 관련 이전소득이 2019년 177만 원에서 2020년 247만 원으로 증가였고, 농업 이외의 이전소득은 2019년 533만 원에서 2020년 659만 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 해당기간 동안 농업소득과 겸업소득은 각각 144만 원과 66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외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또한 증가하였으나 그 크기는 미미하였음. 그에 반해 비경상소득은 64만 원 감소하였음.

○ 다만, 이 결과는 조사 표본이 다른 2013년 패널(2013~2017년)과 2018년 패널(2018~2021년)을 이용하여 도출하였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

하였고, 가구원 규모가 6명 이상이라고 보고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를 6명이라고 가정하였음. 2013~2021년 동안에 가구원 규모가 6명 이상이라고 보고한 가구는 연도별로 최소 0.97%, 최대 2.81%임.

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함.

⁹⁾ 농업직불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부표 1>에 정리하였음.

생한 기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겸업소득과 비경상소득의 경우 2013~2017년과 2018~2021년 사이에 꽤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3〉 농가소득 유형별 추이

단위: 만 원

연도	농가소득	경상소득					비경상 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농업소득	겸업소득	사업외 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2013	2,314	693	275	733	365	45	203
2014	2,347	707	246	704	434	43	212
2015	2,484	765	240	712	505	47	216
2016	2,487	691	251	716	567	44	218
2017	2,504	681	281	731	562	45	204
2018	2,737	860	339	712	624	44	157
2019	2,668	678	366	710	711	45	158
2020	2,918	780	311	714	906	48	158
2021	3,024	837	341	737	917	53	139
증감액 ²⁾	354	-15	91	-23	346	0	-45
증감률 ²⁾	2.4%	-0.4%	4.9%	-0.5%	11.7%	-0.2%	-4.1%
증감액 ³⁾	710	144	66	4	552	7	-64
증감률 ³⁾	3.4%	2.4%	2.7%	0.1%	12.2%	1.9%	-4.6%

주 1) 2인 이상의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모두 소비자물가지수(2020 = 100)로 실질화한 값임. 또한, 가구원 수(N)를 이용하여 균등화한 값을 이용하였음(균등화 지수 = \sqrt{N}).

2) 2013~2019년 동안의 증감액과 증감률임.

3) 2013~2021년 동안의 증감액과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2. 소득분위¹⁰⁾에 따른 농가소득 유형별 추이

○ 2013~2021년 동안에 모든 소득분위에서 농가소득이 증가하였으며, 고소득 가구일수록 농가소득 증가분이 큼.

- 해당기간 동안 1분위는 348만 원(540만 원 → 888만 원), 2분위는 443만 원(1,237만 원 → 1,680만 원), 3분위는 599만 원(1,817만 원 → 2,416만 원), 4분위는 621만 원(2,821만 원 → 3,442만 원), 5분위는 1,540만 원(5,167만 원 → 6,707만 원)이 증가하였음.

- 1~4분위까지의 농가소득 증가분 차이가 크지 않으나, 4분위와 5분위의 농가소득 증가분 격차가 큼. 구체적으로, 5분위 가구의 농가소득 증가 규모는 1분위 가구 증가분의 약 4.4배, 4분위 가구 증가분의 약 2.5배에 해당함. 이를 통해 농가소득이 소득분위별로 불균등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1분위 가구의 농가소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적이전소득이 대부분의 농가소득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심화되고 있음.

- 다른 특징으로는, 2013~2021년 동안 농업소득의 적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 겸업소득은 2013~2017년 사이에 일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임.

○ 2~3분위 가구의 경우, 1분위 가구와 유사하게 농가소득 증가분이 전적으로

¹⁰⁾ 소득분위 구분은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이용하여 실질화하고,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연도별로 부여하였음(부여 시 가중치 적용함). 따라서, 같은 패널 안에서 동일한 가구라 할지라도 균등화한 가처분소득에 따라 연도별로 소득분위가 달라질 수 있음.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에 기인하면서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농가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2~3분위 가구 모두 2013~2021년 동안에 농업소득이 감소하였음.
- 2~3분위 가구 내에서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은 소득 감소와 증가를 통해 농업외에 발생하는 소득의 변동을 일정 부분 상쇄해주고 있음.

○ 4분위 가구의 경우, 2013~2021년 동안 연평균 1.7%의 증가율로 농업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그 결과 매년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1~3분위 가구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임. 그러나 4분위 가구 역시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농가소득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1~3분위 가구와 동일함.

- 2013년 4분위 가구의 농가소득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사업외 소득은 2021년에도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사업외소득의 증가는 2013년 이후로 정체되어 있음.

○ 5분위 가구의 경우,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약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분위와 구별되는 특징임.

- 5분위 가구의 농업소득은 4분위 가구의 농업소득에 비해서 약 3배가량이 많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농업의 규모화·전문화를 달성한 농가의 경우 농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농업소득 다음으로 사업외소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4분위 가구와 마찬가지로 2013년 이후로 소득 증가가 정체되어 있음.
- 겸업소득은 2013년 680만 원에서 2021년 1,028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공적이전소득은 해당기간 동안에 622만 원 증가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5분위 가구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표 2-4〉 소득분위별 농가소득의 유형별 추이

단위: 만 원

구분	연도	농가 소득	농업 소득	겸업 소득	사업의 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비경상 소득
1분위	2013	540	-81	34	198	237	23	129
	2017	695	-78	74	137	401	33	128
	2018	622	-143	71	175	411	19	89
	2021	888	-124	70	201	631	21	88
	증감폭	348	-44	36	3	394	-2	-40
	증가율	6.4%	5.5%	9.5%	0.2%	13.0%	-1.2%	-4.6%
2분위	2013	1,237	309	92	341	304	60	131
	2017	1,313	270	71	268	465	64	175
	2018	1,391	318	113	330	478	42	110
	2021	1,680	278	146	291	813	49	103
	증감폭	443	-32	54	-50	509	-11	-28
	증가율	3.9%	-1.3%	5.9%	-2.0%	13.1%	-2.4%	-2.9%
3분위	2013	1,817	529	217	529	349	56	138
	2017	1,929	372	170	605	550	63	169
	2018	2,122	546	229	553	620	54	119
	2021	2,416	479	135	631	954	84	133
	증감폭	599	-50	-82	102	605	29	-5
	증가율	3.6%	-1.2%	-5.7%	2.2%	13.4%	5.3%	-0.5%
4분위	2013	2,821	676	352	1,123	428	41	200
	2017	2,827	591	272	1,074	660	36	193
	2018	3,109	831	332	987	777	46	135
	2021	3,442	777	327	1,092	1,059	50	136
	증감폭	621	100	-25	-31	631	9	-64
	증가율	2.5%	1.7%	-0.9%	-0.3%	12.0%	2.5%	-4.7%
5분위	2013	5,167	2,038	680	1,476	508	48	418
	2017	5,759	2,253	818	1,572	732	29	355
	2018	6,450	2,755	950	1,519	834	58	334
	2021	6,707	2,785	1,028	1,470	1,130	60	235
	증감폭	1,540	747	348	-6	621	12	-182
	증가율	3.3%	4.0%	5.3%	-0.1%	10.5%	2.9%	-6.9%

주: 2인 이상의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모두 소비자물가지수 (2020 = 100)로 실질화한 값임. 또한, 가구원 수(N)를 이용하여 균등화한 값을 이용하였음(균등화 지수 = \sqrt{N}).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농가의 소비구조 변화

3.1. 총소비지출 및 항목별 소비지출 규모 추이

○ 2013~2021년 동안에 총소비지출이 126만 원 증가하였음. 총소비지출 증가분 126만 원 중 98만 원은 필수재 소비지출로, 33만 원은 선택재 소비지출로 사용하였음.

- 소비항목별 소득탄력성 값을 이용하여 필수재(0~1.0 미만)와 선택재(1.0 이상)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손연정 외, 2019) 본 보고서에서는 소비항목별 재화 유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용, 이계임(2002)의 기준을 사용하여 재화 유형을 구분함.
- 본 보고서에서의 필수재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항목을 의미하고, 선택재는 주류 및 담배,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보험, 기타상품 및 서비스를 의미함. 그러나 감가상각비는 필수재와 선택재의 구분에서 제외함.

○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3년부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필수재 소비지출의 비율은 미미하지만 감소하는 추세이고, 선택재 소비지출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2021년 사이에 그 경향성은 역전되어 필수재 소비지출 비율은 증가하였고, 선택재 소비지출 비율은 감소하였음.

- 2013~2019년까지 필수재 소비지출은 62만 원 증가한 것에 반해 선택재 소비지출은 104만 원 증가하였음.

〈표 2-5〉 농가의 총소비지출과 필수재·선택재 소비지출 규모 추이

단위: 만 원

연도		총소비지출	필수재	선택재
2013		1,622	748 (46%)	618 (38%)
2014		1,644	756 (46%)	633 (38%)
2015		1,655	748 (45%)	637 (39%)
2016		1,673	748 (45%)	642 (38%)
2017		1,625	707 (44%)	635 (39%)
2018		1,700	777 (46%)	674 (40%)
2019		1,780	810 (45%)	722 (41%)
2020		1,749	843 (48%)	654 (37%)
2021		1,748	847 (48%)	650 (37%)
2013~ 2019	증가액	158	62	104
	증가율	1.6%	1.3%	2.6%
2013~ 2021	증가액	126	99	32
	증가율	0.9%	1.6%	0.6%

주: 2인 이상의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모두 소비자물가지수 (2020 = 100)로 실질화한 값임. 또한, 가구원 수(N)를 이용하여 균등화한 값을 이용하였음(균등화 지수 = \sqrt{N}).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필수재 중에서, 2013~2021년 동안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항목과 보건 항목의 지출이 증가하였음. 그 외의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항목에 대한 소비지출은 거의 변화가 없었음.

-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 중에서 의류 및 신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항목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항목과 보건 항목에 비해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필요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¹¹⁾
- 또한, 농촌에서의 주거 관련 비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2013~2021년 동안 주거 및 수도광열 항목에 대한 소비지출 규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1) 10년 전 도시에서 귀농·귀촌한 이후 배 농장을 운영 중인 김00(여, 60대)은 많은 시간을 농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귀농·귀촌 이후에는 의류 및 신발 구입에 대한 소비지출이 크지 않다고 밝힘.

〈표 2-6〉 필수재 항목별 소비지출 규모 추이

단위: 만 원

연도	식품 및 비주류음료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2013	379	47	131	46	145	
2014	394	47	121	46	149	
2015	392	44	118	47	149	
2016	379	43	121	44	162	
2017	356	39	112	40	160	
2018	401	54	118	43	160	
2019	414	54	125	44	173	
2020	437	49	133	46	177	
2021	449	49	130	46	173	
2013~2019	증감액	34	7	-6	-2	28
	증감률	1.4%	2.4%	-0.8%	-0.6%	3.0%
2013~2021	증감액	69	2	-1	0	28
	증감률	2.1%	0.6%	-0.1%	-0.1%	2.2%

주: 2인 이상의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모두 소비자물가지수(2020 = 100)로 실질화한 값임. 또한, 가구원 수(N)를 이용하여 균등화한 값을 이용하였음(균등화 지수 = \sqrt{N}).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3~2021년 동안, 선택재 중에서 보험과 주류 및 담배 항목의 소비지출은 증가하였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항목의 소비지출은 감소하였음.

○ 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 연금보험, 운송 관련 보험 등을 포함)에 대한 소비지출은 2013~2021년 동안 매년 3.2%씩 증가함으로써 해당기간 동안 53만 원이 증가하였음.

- ① 보험 항목의 소비참여율이 2013년 81%에서 90%로 증가한 점, ② 보험에 대한 소비지출 규모가 같은 기간 동안 30~39세 연령대에서 259만 원, 60~69세 연령대에서 140만 원, 40~49세 연령대에서 110만 원 증가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 주류 및 담배 항목은 소비참여율이 2013년 96%에서 2021년에 83%로 감소하였으나, 연도별 평균 소비지출액은 해당기간 동안 16만 원 증가하였음.
 - 2013~2021년 동안에 40~49세 연령대에서 46만 원의 증가를 보인 것이 주요 원인이나, 다른 소비지출 항목과 달리 주류 및 담배 항목은 2013년과 2018년 패널 간 평균 소비지출액이 확연하게 달라서 패널 표집에 따른 차이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음.

- 오락·문화 항목의 소비지출은 2013년과 2021년 두 시점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매년 5.6%씩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음.
 - 오락·문화 항목의 소비지출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2021년 동안에 2019년의 절반 수준을 기록함. 이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감소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음식·숙박 항목의 소비지출은 2013~2019년까지의 평균적인 지출액보다 2020~2021년 동안의 소비지출액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음. 오락·문화 항목처럼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육 항목 소비지출은 2013~2021년 동안 평균적으로 4.4%씩 매년 감소함으로써 해당기간 동안에 총 10만 원이 감소하였음.
 - 이는 소비참여율이 19%에서 12%로 감소하였다는 점에 일부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전체로 살펴봤을 때 교육비 지출은 10만 원 감소하였으나, 교육 항목에 소비지출을 하는 가구의 평균 지출액을 살펴보면 2013년 147만 원에서 2021년 198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연도별 교육 항목의 평균 소비지출액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차례로 147, 152, 129, 151, 150, 230, 216, 204, 198만 원으로, ① 기본적으로 패널 간 평균 지출액의 격차가 존재하며, ② 미미하기는 하지만 2018~2019년과 2020~2021년 사이에 평균적인 소비지출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 항목 또한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7〉 선택재 항목별 소비지출 규모 추이

단위: 만 원

연도	주류 및 담배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보험	기타
2013	21	100	68	47	34	95	186	66
2014	21	100	65	53	32	93	201	69
2015	23	89	63	54	30	94	207	78
2016	24	87	62	53	28	100	218	70
2017	23	85	61	51	27	96	225	69
2018	40	109	65	61	36	96	195	73
2019	39	119	67	63	32	101	226	76
2020	39	104	66	31	26	80	238	71
2021	37	102	67	30	24	82	239	69
증감액 ²⁾	18	18	-1	16	-2	5	39	10
증감률 ²⁾	10.8%	2.8%	-0.3%	5.1%	-0.9%	0.9%	3.2%	2.3%
증감액 ³⁾	16	2	-1	-17	-10	-13	53	3
증감률 ³⁾	7.4%	0.3%	-0.3%	-5.6%	-4.4%	-1.8%	3.2%	0.6%

주 1) 2인 이상의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모두 소비자물가지수(2020 = 100)로 실질화한 값임. 또한, 가구원 수(N)를 이용하여 균등화한 값을 이용하였음(균등화 지수 = \sqrt{N}).

2) 2013~2019년 동안의 증감액과 증감률임.

3) 2013~2021년 동안의 증감액과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2. 소득분위별 농가소비 구조의 변화

○ 소득분위별 소비지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소비의 하한선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점임.

- 횡단면상에서, 총소비와 소비목적별 소비 모두 1~3분위의 소비지출 규모가 큰 차이가 없음. 1~3분위와 4분위 가구 사이에 선택재 소비지출 규모를 중심으로 격차가 다소 존재함. 그러나 이러한 격차는 4분위 가구와 5분위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
- 특히, 1~2분위 사이의 소비지출 금액에 큰 차이가 없으며, 심지어 분석기간 동안에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1분위의 총소비지출이 2분위보다 더 많았음.
- 농가소득의 경우, 1분위 가구에서 소득이 가장 낮고 분위가 한 단계씩 증가할수록 소득이 점차 증가하여 5분위 가구의 소득이 가장 높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임.

○ 총소비지출 규모의 연도별 변화에서, 2013~2021년 동안에 1~4분위의 총소비지출은 증가하였으나 5분위의 총소비지출은 감소하면서 소득분위별로 다른 양상을 보임.

- 1~4분위 중에서도 1분위 가구의 총소비지출 증가가 283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2~3분위 총소비지출 증가는 각각 205만 원, 215만 원으로 비슷하게 증가하였고, 4분위는 총소비지출에 89만 원을 더 사용하였음.
- 2013~2021년 동안, 5분위 가구의 총소비지출은 168만 원 감소하였음. 같은 기간 동안 1~4분위 가구의 총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는 달리 5분위 가구의 총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5분위 가구는 소비를 줄일 추가적인 여력이 있음을 의미함.

〈표 2-8〉 소득분위별 총소비지출 및 필수재·선택재 소비지출 규모 추이

단위: 만 원

구분	연도	소득분위별 소비지출(만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총소비 지출	2013	1,186	1,228	1,376	1,816	2,510
	2017	1,209	1,187	1,415	1,854	2,461
	2018	1,430	1,390	1,562	1,792	2,330
	2019	1,538	1,388	1,602	1,912	2,461
	2020	1,531	1,400	1,624	1,825	2,364
	2021	1,469	1,433	1,590	1,905	2,342
	증감액 ⁴⁾	352	160	226	96	-49
	증감률 ⁴⁾	4.4%	2.1%	2.6%	0.9%	-0.3%
	증감액 ⁵⁾	283	205	215	89	-168
	증감률 ⁵⁾	2.7%	2.0%	1.8%	0.6%	-0.9%
필수재 소비 지출	2013	632	686	693	762	970
	2017	610	646	663	756	862
	2018	697	723	774	790	901
	2019	756	739	792	828	933
	2020	796	766	820	865	967
	2021	775	775	811	890	983
	증감액 ⁴⁾	124	53	99	66	-37
	증감률 ⁴⁾	3.0%	1.2%	2.3%	1.4%	-0.6%
	증감액 ⁵⁾	143	89	118	128	13
	증감률 ⁵⁾	2.6%	1.5%	2.0%	2.0%	0.2%
선택재 소비 지출	2013	354	354	473	732	1,178
	2017	377	335	509	777	1,178
	2018	512	469	564	730	1,097
	2019	560	456	590	813	1,189
	2020	506	440	577	694	1,054
	2021	474	459	557	737	1,027
	증감액 ⁴⁾	206	102	117	81	11
	증감률 ⁴⁾	7.9%	4.3%	3.8%	1.8%	0.2%
	증감액 ⁵⁾	120	105	84	4	-151
	증감률 ⁵⁾	3.7%	3.3%	2.1%	0.1%	-1.7%

주 1) 2인 이상의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모두 소비자물가지수(2020 = 100)로 실질화한 값임. 또한, 가구원 수(N)를 이용하여 균등화한 값을 이용하였음(균등화 지수 = \sqrt{N}).

2) 소득분위 구별 기준은 연도별 가처분소득이며, 따라서 소득분위를 구성하고 있는 농가는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음.

3) 개별 분위 소비지출 배율은 개별 분위에 속한 가구의 소비지출액을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4) 2013~2019년 동안의 증감액과 증감률임.

5) 2013~2021년 동안의 증감액과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소비목적별 소비지출의 연도별 분석에서, 2013~2021년 동안에 필수재의 경우 모든 소득분위에서 소비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선택재 소비지출에서는 1~4분위 가구에서 해당 항목의 소비지출액이 증가하였고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액은 감소하였음.
- 1~3분위의 경우, 필수재와 선택재에 대한 소비지출 증가 규모가 거의 비슷하나 4분위의 경우 필수재에 대한 소비 증가가 대부분이었음. 5분위의 경우에는 필수재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미미하였고, 선택재에 대한 소비는 151만 원 감소하였음.
-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직후인 2020~2021년 동안에는 2019년에 비해 필수재의 경우 소비지출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선택재에 대한 소비지출은 감소하였음.

4. 소결

- 농가소득 구조 분석 결과, 모든 분위에서 ① 공적이전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② 사업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나 사업외소득의 증가는 2013~2021년 동안에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함.
- 농가소득 구조에서 소득분위별로 두드러진 차이점은 ① 1분위 가구의 경우 매년 음의 농업소득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② 5분위 가구의 경우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절대적 규모 측면에서 다른 소득분위의 가구와 확연하게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임.

- 소득분위별 농가소비 구조에서의 특징은 ① 필수 생계비가 필요한 만큼 소비의 하한선이 명확하며, ② 농가소득과 유사하게 4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의 격차가 크다는 점임.

- 코로나19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소득 증가와 무관하게 불확실성의 증가는 소비지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신관호, 주원, 2002).
 - 모든 종류의 불확실성이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대면접촉이 불가했던 코로나19의 특성상 오락·문화 및 음식·숙박 항목의 소비지출이 필연적으로 감소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그러나 감소한 항목의 소비지출을 내구재 구입 등 다른 항목의 소비지출로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항목의 소비지출 규모 변화는 거의 없었음.

- 다만 소득 및 소비 변화는 연도별 통일성을 위해서 2인 이상의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2장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은 21%로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70세 이상일수록, 여성일수록, 1ha 미만인 소규모 농가일수록 1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1인 가구의 소득 및 소비 규모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1인 가구를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2장 2절과 3절에 제시된 소득 및 소비 규모보다 더 작아질 수 있음.

제3장

농가의 평균소비성향 분석



3

농가의 평균소비성향 분석

1. 가처분소득¹²⁾의 변화

- 2013~2021년 동안에 모든 분위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였으며, 증가율 면에서는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연평균 6.8%로 가장 높게, 절대 규모 면에서는 5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1,474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 2013~2021년 동안의 분위별 농가소득 변화와 비교했을 때, 1분위 가구의 경우 농가소득의 증가분 중에서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규모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음.
 - 1분위 가구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농가소득이 348만 원 증가하였고, 그중 비소비지출인 204만 원을 제한 144만 원이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짐.
 - 2분위 가구의 경우 443만 원 중 370만 원이, 3분위 가구의 경우 599만 원

¹²⁾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 대비 총소비지출의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균소비성향을 논의하기 이전에 가처분소득의 연도별 추이를 먼저 살펴봄.

중 490만 원이, 4분위 가구의 경우 621만 원 중 616만 원이, 5분위 가구의 경우 1,540만 원 중 1,474만 원이 가치분소득 증가로 이어졌음.

〈표 3-1〉 소득분위별 가치분소득 및 농가소득 추이

단위: 만 원

구분	연도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치분 소득	2013	207	958	1,518	2,352	4,485
	2014	173	967	1,511	2,271	4,760
	2015	379	1,051	1,589	2,370	5,072
	2016	323	1,048	1,605	2,404	5,036
	2017	377	1,084	1,615	2,420	5,091
	2018	111	1,080	1,727	2,587	5,645
	2019	82	1,031	1,659	2,477	5,442
	2020	297	1,260	1,919	2,852	5,817
	2021	351	1,328	2,008	2,968	5,959
	증가액	144	370	490	616	1,474
	증가율	6.8%	4.2%	3.6%	3.0%	3.6%
농가 소득	2013	540	1,237	1,817	2,821	5,167
	2014	491	1,217	1,862	2,700	5,472
	2015	682	1,319	1,896	2,820	5,726
	2016	646	1,290	1,944	2,829	5,746
	2017	695	1,313	1,929	2,827	5,759
	2018	622	1,391	2,122	3,109	6,450
	2019	650	1,372	2,063	3,014	6,245
	2020	767	1,584	2,334	3,328	6,581
	2021	888	1,680	2,416	3,442	6,707
	증가액	348	443	599	621	1,540
	증가율	6.4%	3.9%	3.6%	2.5%	3.3%

주 1) 2인 이상의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모두 소비자물가지수(2020 = 100)로 실질화한 값임. 또한, 가구원 수(N)를 이용하여 균등화한 값을 이용하였음(균등화 지수 = \sqrt{N}).

2) 소득분위 구별 기준은 연도별 가치분소득이며, 소득분위를 구성하고 있는 농가는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음.

3) 개별 분위 소득 배율은 개별 분위에 속한 가구의 소득을 1분위 가구의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농가소득-가치분소득의 관계가 역진성을 보이는 이유로는 농업소득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제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음.¹³⁾

¹³⁾ 농가소득-가치분소득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농가경제조사에서 비소비지출은 조세 및 부담금, 공적연금 납부금, 사회보험 납부금, 이자,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저소득분위 가구의 경우 누적된 농가부채로 인하여 농가소득 증가의 대부분을 대출 이자 상환에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음. 또는 고소득분위 가구가 저소득분위 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정책자금을 통한 대출이 많기 때문에 대출 이자 상환의 부담이 적을 가능성도 있음.
- 2013~2021년 동안 1분위 가구의 농가부채가 1,769만 원에서 2,945만 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그에 반해 2~5분위 가구의 농가부채 증가액은 30~347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였음<부표 2>.
 - 또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5분위 가구의 농가부채가 3,747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1분위 가구 순임. 즉, 1분위 가구의 농가부채가 2~4분위 가구의 농가부채보다 많음<부표 2>.¹⁴⁾
 - 1분위 가구의 농가부채보다 5분위 가구의 농가부채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1분위와 달리 5분위 가구의 농가소득 증가분이 대부분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가소득-가처분소득’ 관계의 역진성이 대출 이자 상환 때문이 아닐 수 있거나 혹은 대출 이자 상환 때문이라면 대출의 경로가 다를 수 있음.
 - 즉, 5분위 가구의 경우 1분위 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수 있음.

¹⁴⁾ 가구원 수를 이용하여 균등화하지 않은 농가당 부채 규모 또한 2021년 기준으로 5분위 가구 6,126만 원, 1분위 가구 4,770만 원, 4분위 가구 2,775만 원, 3분위 가구 2,207만 원, 2분위 가구 1,975만 원 순임.

2. 평균소비성향의 변화

2.1. 연도별 평균소비성향의 변화

- 2013~2021년 동안에 가처분소득과 총소비지출 모두 증가하였으나 가처분소득 증가가 총소비지출 증가를 상회하면서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하였음.
 - 농가소득에서 총비소비지출(조세 및 사회보장 보험료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2013년 1,902만 원에서 2021년 2,520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2013~2021년 동안 총 618만 원이 증가하였음.
 - 이에 반해 총소비지출은 2013~2021년 동안에 1,622만 원에서 1,748만 원으로 변화하면서 해당기간 동안 총 126만 원 증가하였음.
 - 가처분소득 중에서 총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되는 평균소비성향은 2013년 85.3에서 2021년 69.3으로 16%p가 감소하였음. 다만, 2020년과 2021년의 평균소비성향이 2013~2019년 동안의 평균소비성향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013~2021년 동안 농가의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 이유로는 ① 고령화의 심화, ②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농가의 예비적 저축(농가의 부채 상환을 포함) 증가, ③ 미래소득 증가를 위한 농업 혹은 겸업활동에 대한 투자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음.
 - Kuznets가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소득의 증가 비율과 소비의 증가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평균소비성향은 일정함.¹⁵⁾

¹⁵⁾ Kuznets, S. (1946).

〈표 3-2〉 평균소비성향 추이

단위: 만 원, %

연도	가처분소득	총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
2013	1,902	1,622	85.3
2014	1,935	1,644	84.9
2015	2,088	1,655	79.2
2016	2,080	1,673	80.5
2017	2,117	1,625	76.8
2018	2,228	1,700	76.3
2019	2,137	1,780	83.3
2020	2,428	1,749	72.0
2021	2,520	1,748	69.3
증감폭	618	126	-16%p
증가율	3.6%	0.9%	-

주: 2인 이상의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모두 소비자물가지수(2020 = 100)로 실질화한 값임. 또한, 가구원 수(N)를 이용하여 균등화한 값을 이용하였음(균등화 지수 = \sqrt{N}).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2.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 변화

○ 2013~2021년 동안 1~2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이 항상 100을 상회하였는데, 이는 해당 분위의 가구에서 가처분소득보다 더 많은 총소비지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연도별로 농가들 사이의 소득분위 변동이 거의 없다면, 1~2분위에 속한 가구의 경우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총소비지출의 차이가 매우 커서 토지와 같은 별도의 자산이 없는 경우 해당 가구들의 가계부채 누적은 가계의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요인임.
- 1분위 가구의 가계부채 누적은 2013년 979만 원에서 2021년 1,118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동일 연도 내에서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은 고소득분위로 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득가구일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은 매우 정형화된 양상임.
 - 2021년 기준으로, 3분위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9, 4분위 가구의 경우 64, 5분위 가구의 경우 39를 기록하였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봤을 때, 2013~2021년 동안에 모든 소득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1분위 가구의 2018~2019년 평균소비성향이 1,000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당 연도의 가처분소득이 각각 111만 원과 82만 원으로 매우 낮게 계산되었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소득조사 시 소득분포의 양 끝단에서 측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Meyer, B.D. & J.X. Sullivan, 2017), 농가경제조사의 경우에도 2018~2019년 1분위 가구에서 측정오차로 인한 특이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는 점(즉, 패널 간 격차)과 동일 패널 내에서도 2018~2019년의 가처분소득이 2020~2021년의 값과 비교해봐도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 판단 근거임. 따라서 평균소비성향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할 때 2018~2019년의 수치에 대한 해석을 배제하였음.

〈표 3-3〉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단위: %

연도	평균소비성향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3	573	128	91	77	56
2014	697	124	95	80	54
2015	312	119	90	79	50
2016	385	114	97	77	50
2017	321	109	88	77	48
2018	1287	129	90	69	41
2019	1880	135	97	77	45
2020	515	111	85	64	41
2021	419	108	79	64	39
증감폭	-154%p	-20%p	-11%p	-13%p	-17%p

주 1) 2인 이상의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모두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2020 = 100)한 값임. 또한, 가구원 수(N)를 이용하여 균등화한 값을 이용하였음(균등화 지수 = \sqrt{N}).

2) 소득분위 구별 기준은 연도별 가처분소득이며, 따라서 소득분위를 구성하고 있는 농가는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음.

3) 개별 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개별 분위의 총소비지출이 해당 분위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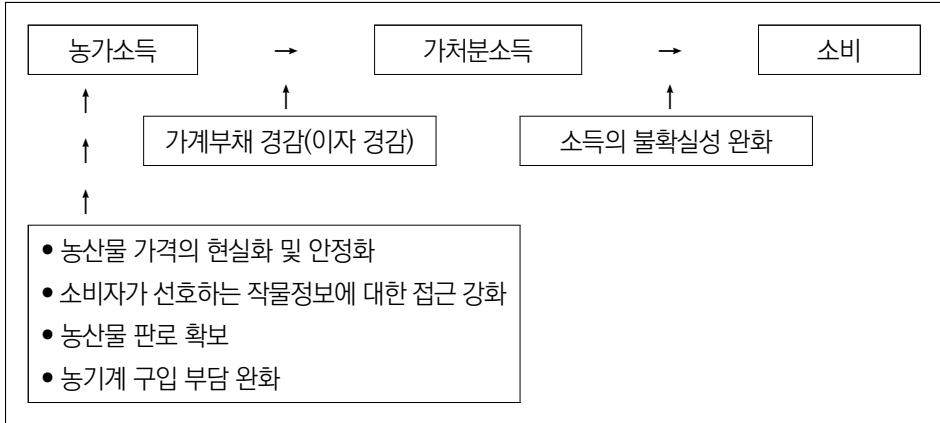
○ 가처분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비성향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농가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농가 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¹⁶⁾뿐만 아니라

¹⁶⁾ 수도작을 재배하는 이00(50대 후반)와 수도작 및 콩, 고추 등 다양한 발작물을 재배하는 이00(50대 초반)은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의 현실화 및 안정화, 소비자가 선호하는

평균소비성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농가부채(이자) 부담¹⁷⁾ 및 소득의 불확실성 완화 정책이 함께 필요함을 시사함.¹⁸⁾

〈그림 3-1〉 농가의 평균소비성향 회복을 위한 과제



자료: 저자 작성.

작물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농산물 판로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함. 또한, 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측면에서는 농기계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인터뷰 일자: 2023. 5. 30.).

17) 이00(50대 초반)은 농지 및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부담이 되어 추가적인 소득 증가의 대부분을 부채 원금 상환에 사용한다고 밝힘(인터뷰 일자: 2023. 5. 30.).

18) 평균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분배구조, 주거비 변화, 고령화 정도, 소득의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이 있음(현대경제연구원, 2017).

제4장

농가의 소득유형별 한계소비성향 분석



4

농가의 소득유형별 한계소비성향 분석

1. 분석개요

- 농가의 소비지출이 농가소득 중 어떤 소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농가경제조사 2013~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1,743농가의 소득, 소비, 자산 및 부채, 가구 및 가구원 특성에 대한 자료를 추출·연계하여 균형패널을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소득분위에 따른 농가소득 유형별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하였음.

2. 분석자료 및 변수

2.1. 분석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MDIS)에서 제공하는 농가경제조사의 2013년 패널(2013~2017)을 이용함.

- 농가경제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계속 통계로, 전국의 농가 중에서 3,000가구를 추출하여 5개년 동안 추적조사하는 5개년 단위 패널조사임.
 - 조사항목은 작물재배현황, 수입 및 지출, 농업노동 투입내역, 농가자산 및 부채 등을 포함함.
 - 모집단인 농가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5년마다 표본이 변경됨.
 - 따라서 계속 통계이기는 하지만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 표본이 유지되는 분석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 가장 최근 패널인 2018년 패널은 2023년 4월 기준으로 4개 연도 자료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연도에 대한 정보를 더 제공하고 있는 2013년 패널을 분석자료로 선택함.
- 표본 개편 연도는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및 2018년임.
 - 통계청 MDIS에서는 농가수지(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료는 1998년부터, 그 외의 모든 자료는 2003년부터 제공하고 있음.

2.2. 분석변수

-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로는 소비변수, 소득변수, 자산 및 부채 관련 변수, 순자산, 가구주 및 가구 특성을 반영한 변수임.
- 3장의 기초분석에서는 가구원 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구원 수를 이용하여 균등화(+실질화)한 값을 이용하였으나, 본 장의 회귀분석에서는 가구 특성을 반영하는 통제변수로서 가구원 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금액과

관련된 변수는 모두 실질화(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작업만 수행한 후 사용하였음.

- 종속변수로서 총소비지출액이 사용되었음.
- 주요 설명변수로 농가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농업소득,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을 사용하였음.¹⁹⁾

○ 자산 및 부채 관련 변수는 절대 규모 자체보다는 한 해 동안의 변화분이 소비 지출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 순증감액을 변수로 이용함.

- 2013년 패널은 2018년 패널과 달리, 자산 및 부채 관련 항목의 연초와 연말 가치액을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연도별 자산(부채) 변동 변수는 해당 연도 연말 자산(부채)에서 연초 자산(부채)을 제함으로써 도출하였음.
- 이렇게 계산된 자산 변동액과 부채 변동액은 가구의 현금 흐름 증감에 영향을 줌으로써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소득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

○ 토지나 동물 및 식물 등의 농업 관련 자산 또한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의 농가자산 평가액에서 연초의 농가부채 평가액을 뺀 금액인 순자산을 통제변수로 사용함.

○ 가구주 특성 변수로는 연령과 연령의 제곱 변수를, 가구 특성 변수로는 가구원 수와 미혼자녀 수를 사용하였음.

¹⁹⁾ 예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결합 F-test를 실시한 결과, 농업외소득인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을 구분하고 이전소득인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소득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였음.

- 소비는 가구주 연령과 비선형의 관계성 - 즉, 연령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나 그 증가율 자체는 점차 감소하는 - 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령뿐만 아니라 연령의 제곱을 분석모형에 포함함.
- 가구 특성 변수로는 가구원 수와 미혼자녀 수를 포함함.
- 그 외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인 가구주 성별이나 교육 수준 등은 분석모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수에서 제외하였음.

2.3. 분석대상 요약통계량

- 2013년 표본조사 가구 중 2013~2017년 동안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1,743개의 표본 가구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에서 1인 단독가구는 제외하였음.
- 소득분위별 분석을 위해 농가의 가처분소득 5개년 평균값을 이용하여 소득분위를 구분함.
 - 농가경제조사는 횡단면 가중치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중치 또한 동일 가구 횡단면 가중치의 5개년 평균값을 이용함.
 - 분석대상인 총 1,743개 농가 중에서 1분위 가구는 362개, 2분위 가구는 330개, 3분위 가구는 353개, 4분위 가구는 351개, 5분위 가구는 347개임.

〈표 4-1〉 요약통계량(연도=2013)

단위: 만 원, %

변수	전체 평균	1분위 평균	2분위 평균	3분위 평균	4분위 평균	5분위 평균
소비지출(만 원)						
총소비지출	2,657 (1,723)	1,651 (989)	1,801 (767)	2,364 (1,120)	3,028 (1,270)	4,393 (2,334)
필수재 소비지출	1,181 (557)	960 (469)	997 (386)	1,148 (563)	1,288 (551)	1,502 (603)
선택재 소비지출	1,023 (1,063)	419 (582)	484 (432)	829 (689)	1,248 (808)	2,103 (1,443)
농가소득(만 원)						
농업소득	1,148 (2,711)	298 (1,172)	644 (935)	1,020 (1,281)	1,213 (1,788)	2,538 (5,170)
겸업소득	433 (1,292)	107 (389)	234 (688)	307 (753)	492 (1,011)	1,013 (2,371)
사업외소득	1,296 (2,024)	210 (348)	482 (776)	980 (1,300)	1,811 (1,875)	2,942 (3,091)
공적이전소득	580 (697)	394 (365)	458 (317)	583 (553)	712 (854)	742 (1,023)
사적이전소득	66 (270)	49 (159)	98 (245)	65 (221)	65 (294)	56 (375)
자산 변동액(만 원)	763 (4,168)	-481 (2,935)	47 (3,865)	527 (3,056)	930 (3,559)	2,747 (5,947)
부채 변동액(만 원)	32 (2,485)	12 (787)	-112 (1,053)	81 (1,491)	-245 (3,399)	430 (3,843)
순재산(만 원)	40,897 (53,973)	32,224 (36,552)	30,426 (34,936)	35,554 (33,414)	37,654 (37,958)	68,370 (92,159)
가구 재정상황						
적자 가구(%)	43.0	75.2	49.6	37.0	25.8	28.7
흑자 가구(%)	57.0	24.8	50.4	63.0	74.2	71.3
가구주 특성						
여성 가구주(%)	3.7	1.9	4.4	2.3	4.9	4.9
연령(세)	65.2 (9.7)	71.5 (8.2)	68.9 (8.7)	65.3 (9.1)	62.7 (8.6)	58.0 (7.8)
교육수준(%)						
중졸 미만	42.6	64.4	50.7	39.3	37.6	21.6
중졸 이상 고졸 미만	22.4	17.1	23.8	26.6	20.0	24.8
고졸 이상 전문대졸 미만	27.5	14.7	21.4	28.0	36.3	36.5
전문대졸 이상	7.5	3.8	4.2	6.2	6.2	17.2

(계속)

변수	전체 평균	1분위 평균	2분위 평균	3분위 평균	4분위 평균	5분위 평균
가구 특성						
가구원 수(명)	2.6 (1.0)	2.1 (0.4)	2.3 (0.6)	2.5 (0.8)	2.9 (1.1)	3.2 (1.2)
미혼자녀 수(명)	0.4 (0.7)	0.1 (0.3)	0.2 (0.4)	0.2 (0.6)	0.5 (0.8)	0.8 (1.0)
영농 특성						
전업 및 겸업(%)						
전업농가	47.9	78.9	56.6	45.7	31.2	28.6
1종겸업	17.4	9.8	18.6	18.6	18.1	21.7
2종겸업	34.7	11.3	24.8	35.8	50.7	49.7
주업, 부업 및 자급(%)						
전문농가	29.5	17.9	19.6	34.7	33.9	40.6
일반농가	29.8	62.4	48.0	24.4	10.8	5.1
부업농가	33.0	13.5	23.2	35.3	45.5	46.5
자급농가	7.7	6.2	9.1	5.6	9.9	7.8
영농형태(%)						
논벼농가	21.2	33.3	32.2	17.3	13.4	10.6
과수농가	9.5	7.6	7.4	15.2	12.1	5.0
채소농가	21.3	31.5	22.4	21.1	16.1	15.6
특작농가	1.5	3.5	2.1	0.8	0.6	0.7
화훼농가	0.5	1.4	0.1	0.5	0.2	0.2
전작농가	3.4	6.1	4.5	4.2	2.0	0.4
축산농가	6.6	4.5	4.2	4.7	3.7	15.9
기타농가	1.3	0.8	2.2	0.4	1.1	1.8
경지규모(%)						
1ha 미만	48.3	59.0	53.2	42.6	46.2	41.0
1ha 이상~3ha 미만	38.5	35.7	38.2	47.4	38.8	32.3
3ha 이상~5ha 미만	7.7	3.7	5.5	8.3	8.8	12.2
5ha 이상	5.5	1.5	3.1	1.8	6.3	14.5
가구 수	1,743	362	330	353	351	347

주 1) 2인 이상의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모두 소비자물가지수(2020 = 100)로 실질화한 값임.

2) 소득분위 구별 기준은 5개 연도 가처분소득의 평균값이며, 따라서 분석기간 동안 동일한 소득분위를 유지함.

3)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4-1>에 제시한 요약통계량(2013년)에 따르면, 총소비지출액의 평균은 2,657만 원이며, 필수재 소비지출액은 1,181만 원, 선택재 소비지출액은 1,023만 원임.
 - 필수재와 선택재의 소비지출 평균액이 거의 비슷하나 필수재 소비지출에 비해 선택재 소비지출의 표준편차가 2배가량 더 크다는 점에서 선택재 소비지출 규모의 범위가 더 넓음을 알 수 있음.

- 평균적으로 농업소득은 1,148만 원, 겸업소득은 433만 원, 사업외소득은 1,296만 원, 공적이전소득은 580만 원,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은 66만 원을 기록하였음.

- 자산 변동액은 763만 원(표준편차 4,168만 원), 부채 변동액은 32만 원(표준편차 2,485만 원)임. 자산과 부채의 차인 순자산은 4억 897만 원임.

- 전체적으로 가처분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적자 가구는 43%, 소비지출보다 가처분소득이 더 많은 흑자 가구는 57%였음. 적자 가구 비율은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특히, 1분위 가구의 경우 75.2%가 가용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음.

- 분석대상 농가 중에서 여성인 가구주는 3.7%이며, 전체 농가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5.2세임. 또한 최종 학력이 중졸 미만인 가구주가 4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중졸 이상 고졸 미만은 22.4%, 고졸 이상 전문대졸 미만은 27.5%, 전문대졸 이상은 7.5%를 차지하였음.
 - 여성 가구주 비율은 4~5분위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음.
 - 고소득분위 가구일수록 가구주 평균 연령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음.

- 고소득분위 가구일수록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5분위 가구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 비율이 다른 분위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았음.
- 평균적인 가구원 수는 2.6명이었으며, 그중 미혼자녀 수는 0.4명이었음.
- 농가 중에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47.9%, 1종겸업(농업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높은 경우)은 17.4%, 2종겸업(농업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낮은 경우)은 34.7%임. 저소득분위일수록 전업농의 비율이 높았고, 고소득분위일수록 겸업농의 비율이 높았음.
- 농가 중에서 전문농가는 29.5%, 일반농가는 29.8%, 부업농가는 33%, 자급농가는 7.7%였음. 저소득분위일수록 일반농가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분위일수록 전문농가와 부업농가의 비율이 높음.
- 영농형태 측면에서는 채소농가(21.3%), 논벼농가(21.2%), 과수농가(9.5%) 및 축산농가(6.6%)가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저소득분위일수록 논농사와 채소농사를 짓는 농가의 비율이 높았고, 고소득분위일수록 축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음.
- 경지규모가 1ha 미만인 농가는 48.3%, 1ha 이상~3ha 미만인 농가는 38.5%, 3ha 이상~5ha 미만인 농가는 7.7%, 5ha 이상인 농가는 5.5%였음. 저소득분위일수록 1ha 미만인 경지를 가진 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소득분위일수록 3ha 이상인 경지를 가진 농가의 비율이 높았음.

3. 분석방법 및 모형

3.1. 분석방법²⁰⁾

- 소비지출은 소득이나 자산 등과 같은 관찰가능한 요인뿐만 아니라 소비에 대한 개인의 태도, 습관 및 재화에 대한 선호도 등 관찰불가능한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이러한 관찰불가능한 요인들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함수 추정식에서 누락됨.

- 그러나 소비행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요인을 회귀분석에서 누락하는 경우, 설명변수로 포함되어 있는 관찰가능하며 측정가능한 변수들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과다하게 혹은 과소하게 추정되는 편의(bias)가 발생함.

- 이뿐만 아니라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자질, 근로역량 등은 소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소득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개인의 자질이나 근로역량 또한 관측되지 않음. 따라서 측정불가능한 요소들은 소비함수 추정식에서 오차항에 포함되어 결국은 추정된 계수값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즉,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소비 추정식에서는 주요 설명변수인 소득과 오차항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가 발생함. 이런 경우, 최소자승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s: OLS)의 기본 가정인 직교조건($Cov(u_i, X_i) = 0$)을 위배하게 됨.

○ 따라서 주요한 설명변수의 누락 및 내생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여 불편추

²⁰⁾ Wooldridge, J.M. (2010). pp.281-344.

정치(unbiased estimate)를 도출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고정효과 방법을 사용하였음.

- 고정효과 방법은 분석 단위별로 평균 차분(mean differencing)을 한 후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임.
- 즉, $(Y_{i,t} - \bar{Y}_i) = (X_{i,t} - \bar{X}_i) + u_{i,t}$ 인 형태로 회귀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적인 특성과 그러한 특성으로 인한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의 변화분 또한 제거되므로 편의가 없는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음.
- 다만, 고정효과 모형은 분석 단위가 상대적으로 작고, 관측 시간이 긴 패널 분석에 더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음.
- 5년 단위로 표본이 개편되는 농가경제조사 특성상 상대적으로 분석 단위가 많고, 관측 시간이 짧은 wide panel임에도 본 보고서에서는 고정효과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wide panel에서 고정효과 방법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자유도 상실의 문제보다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3.2. 분석모형

○ 소득유형별 한계소비성향 분석을 위한 추정식은 기본적으로 생애소득가설에 기반하였음.

- 농가소비는 현재 농가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① 농가소득 변동성이 커서 전적으로 현재의 농가소득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 ② 적자 가구의 경우 단순히 현재소득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득화할 수 있는 토지 등의 자산에 의해서도 농가소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형을 선택함.

- Langemeier, R.M. & F.G. Patrick(1990)은 부분조정모형, 상대소득가설모형, 항상소득가설모형 및 생애소득가설모형을 이용하여 일리노이주의 농가를 대상으로 1979~1986년 동안의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고, 생애소득가설모형이 다른 세 가지 모형에 비해서 농가소비 행태를 설명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임.
- 특히, 전기의 소비, 소득과 순자산(net wealth)이 농가의 소비 행위를 잘 설명함을 보임.

○ 분석을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음.

$$C_{i,t} = X_{i,t}\beta_1 + \beta_2 C_{i,t-1} + \beta_3 \Delta A_{i,t} + \beta_4 \Delta D_{i,t} + \beta_5 \Delta NW_{i,t} + Z_{i,t}\beta_6 + \zeta_i + \tau_t + u_{i,t}$$

- i : 표본 농가, t : 2013~2017년
- $C_{i,t}, C_{i,t-1}$: 농가의 현재 소비 및 전기 소비
- X : 농업소득,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β_1 : 소득유형별 한계소비성향의 벡터(소득유형별 계수 추정치)
- $\Delta A, \Delta D$: 연초 대비 연말의 농가 자산 및 부채 변동액
- ΔNW : 농가의 순자산(자산-부채)
- Z : 가구주(연령, 연령제곱) 및 농가(가구원 수, 미혼 자녀 수) 특성
- ζ_i, τ_t : 농가 고정효과 및 연도 고정효과

4. 분석결과

4.1. 농가의 총소소비지출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 총소소비지출에 대한 사업외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0.114로 추정되었으며, 그 이외의 다른 유형의 소득 증가는 총소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데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 사업외소득이 100만 원 증가하면 총소소비지출은 11만 4,000원 증가한다는 의미로, 이 결과는 정선화, 강혜정(2015)이 농가경제조사 2008~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사업외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인 0.1과 유사한 수치임.
- 모형(1)~모형(4)는 관심변수인 농가소득의 구성 요소만을 이용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에서 전기 소비지출과 자산 및 부채 관련 변수, 가구주 및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분석에 포함했을 때 소득유형별 한계소비성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줌.
- 한계소비성향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모형(1)의 농가소득 유형별 계수값들이 크다는 것은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하는 설명 변수의 누락은 관심 변수의 계수값을 과다 추정하는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본 보고서에서는 모형(4)를 최적 모형으로 선택하고, 다음에 진행되는 모든 분석은 모형(4)에 기반하였음.

○ 사업외소득²¹⁾이 농업소득이나 겸업소득에 비해서 안정적이며 확실하기 때문에 해당 소득의 증가가 총소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²¹⁾ 농가 가구원이 벌어들인 임금소득(노임, 급료) 등을 포함함.

〈표 4-2〉 총소비지출에 대한 소득유형별 한계소비성향

변수	총소비지출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농가소득				
농업소득	0.013* (0.007)	0.011 (0.008)	0.011 (0.008)	0.011 (0.008)
겸업소득	0.017 (0.034)	0.018 (0.024)	0.018 (0.024)	0.009 (0.023)
사업외소득	0.150*** (0.029)	0.134*** (0.025)	0.134*** (0.025)	0.114*** (0.023)
공적이전소득	0.019 (0.030)	0.018 (0.030)	0.018 (0.030)	0.009 (0.028)
사적이전소득	0.082 (0.069)	0.069 (0.071)	0.069 (0.071)	0.062 (0.077)
전기(t-1) 소비지출		-0.010 (0.021)	-0.010 (0.021)	-0.015 (0.020)
자산 변동액		0.004 (0.004)	0.004 (0.004)	0.003 (0.004)
부채 변동액		-0.000 (0.007)	-0.000 (0.007)	-0.001 (0.007)
순자산		0.007*** (0.002)	0.007*** (0.002)	0.007*** (0.002)
가구주 특성				
연령			-3.745 (52.456)	19.550 (49.509)
연령의 제곱			0.016 (0.395)	-0.169 (0.375)
가구 특성				
가구원 수				170.147*** (62.621)
미혼자녀 수				114.917 (88.719)
표본 수	8,715	6,972	6,972	6,972
가구 수	1,743	1,743	1,743	1,743

주 1) 농가와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결과로,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표준오차를 나타냄.

2) 유의수준: *** p<0.01, ** p<0.05, * p<0.1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소비자는 소득의 변동폭이 적고 지속성이 보장된 소득의 증가를 항상소득의 증가로 인식하여 현재소비를 증가시킬 유인이 있음.²²⁾
- 2013~2017년 동안 동일 가구 내의 소득유형별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²³⁾의 평균값이 농업소득²⁴⁾은 14.4, 겸업소득은 1.7, 사업외소득은 1.2, 공적이전소득은 1.1, 사적이전소득은 1.7로 계산되었음.

4.2. 소득분위에 따른 소득유형별 한계소비성향

- 소득분위별 분석에서도 농업소득의 총소비지출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사업외소득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어 소득의 변동성과 한계소비성향 간의 반비례적인 관계를 확인하였음.
 - 소득의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현재의 소득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현재소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예비적 저축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더 강함.
 - 3~4분위에서 농업소득의 증가가 총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이유는 1~2분위에 비해서 전문농가의 비율이 높은데다 3ha 이상의 경지규모를

²²⁾ 이 이론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1957년 발표한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로 소득은 항상소득(permanent income)과 임시소득(transitory income)으로 구분되며, 현재소비는 항상소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 다시 얘기하면 임시소득의 증가는 현재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일시적인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 재정정책을 통해서도 소비 진작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²³⁾ 변수의 표준편차를 표본평균의 값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상대적인 분포도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함.

²⁴⁾ 농업소득의 경우, 5개년 중에 음의 농업소득이 매우 큰 연도가 있어서 5개년 평균값이 매우 작은 경우 분모 값이 매우 작아서 변동계수 값이 크게 계산되어짐. 1차적으로 구한 농업소득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각 변동계수 평균값 좌우로 2표준편차를 벗어난 값(즉, 변동계수 평균값 $\pm 2 \times$ 변동계수 표준편차)을 가진 가구를 제외하면 농업소득의 평균 변동계수는 0.6으로 감소하나 표준편차는 10.5로 여전히 큼.

가진 농가가 많아 농업소득의 절대적 규모가 크고, 따라서 농업소득을 주 소득원 중 하나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3~4분위보다 더 높은 농업소득을 가진 5분위의 경우 농업소득이 총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는 ① 기본적으로 만족할 만한 소비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의 증가를 소비지출의 증가로 늘릴 유인이 3~4분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으며(이는 사업외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3~4분위에 비해서 낮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음), ② 농업소득이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농업소득을 주소득원으로 인지할 가능성은 높으나 5분위 가구 중에는 축산농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3~4분위보다 더 크기 때문일 수 있음.

○ 전반적인 경향성을 기준으로, 3분위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높고 3분위 가구를 기준으로 양극단의 분위로 갈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짐.

-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장인성, 2019; 노용환, 2021; 홍기석, 박소민, 2021)와 상반되지만 농촌 저소득분위의 소득-소비 불균형과 가계부채 누적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보임. 증가한 소득을 모두 부채 상환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1분위 가구의 경우, 사업외소득의 증가가 총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함.

- 사업외소득이 100만 원 증가하는 경우, 총소비지출은 8만 1,000원 증가함.
- 1분위 가구에서의 적자 가구 비율이 매우 높은데, 소득-소비의 불균형이 심한 상태가 계속 이어져 온 경우라면 소득의 증가는 다른 소득 증가를 위해 재투자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소득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고, 소득 증가가 부채 상환으로 이어지는 경우 심지어 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음(겸업소득의 경우).
- 또한, 1분위 가구의 경우 부채의 증가가 총소비지출의 증가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결과는 적자 가구의 경우 일정 부분의 소비지출을 부채의 증가를 통해서 감당해 왔다는 <부표 4>의 적자 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결과와도 합치됨.
- 2분위 가구의 경우, 사업외소득이 100만 원 증가하면 총소비지출이 14만 8,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3분위 가구의 경우, 겸업소득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소득이 총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공적이전소득(0.315), 사업외소득(0.175), 사적이전소득(0.165), 농업소득(0.030) 순으로 한계소비성향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드러남.
 -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단일 비교에는 무리가 있지만, 정선화, 강혜정의 보고서에서 공적이전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의 결과가 최대 0.060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본 보고서에서 추정한 공적이전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분석기간인 2013~2017년 사이에 ①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매월 꾸준하게 10만 원에서 20만 원가량 증가했다는 점(2014년), ② 발농업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발작물로 확대되고, 지급단가 또한 40만 원/ha에서 50만 원/ha로 인상되었다는 점(2015년)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됨.

○ 4분위에서는 총소비지출에 대한 농업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047, 사업의 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125로 추정되었음. 4분위에서도 여전히 소득의 변동성이 크면 한계소비성향이 더 낮게 추정되는 경향성이 발견됨.

○ 5분위 가구의 경우, 사업외소득의 총소비지출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0.111로 추정되었으며 다른 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유의하지 않음.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점이 1분위 가구와 구별되는 특징임.

〈표 4-3〉 소득분위에 따른 농가소득 유형별 총소비지출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변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농가소득					
농업소득	0.004 (0.013)	0.034 (0.024)	0.030* (0.016)	0.047** (0.018)	0.006 (0.009)
겸업소득	-0.466** (0.196)	0.044 (0.046)	0.130 (0.088)	0.082 (0.054)	0.020 (0.024)
사업외소득	0.081* (0.048)	0.148*** (0.053)	0.175*** (0.035)	0.125** (0.051)	0.111*** (0.035)
공적이전소득	0.016 (0.082)	0.150 (0.124)	0.315*** (0.096)	0.082 (0.079)	-0.024 (0.025)
사적이전소득	0.175 (0.179)	0.097 (0.095)	0.165* (0.091)	-0.068 (0.152)	0.016 (0.257)
자산 변동액	0.001 (0.002)	-0.005 (0.006)	0.004 (0.006)	-0.003 (0.010)	0.012 (0.008)
부채 변동액	0.021** (0.009)	0.015 (0.014)	0.006 (0.012)	0.004 (0.010)	-0.020* (0.012)
표본 수	1,448	1,320	1,412	1,404	1,388
가구 수	362	330	353	351	347

주 1) 소비지출별, 소득분위별로 각각 회귀분석하여 도출한 추정치임.

2) 농가와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결과로,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표준오차를 나타냄.

3) 유의수준: *** p<0.01, ** p<0.05, * p<0.1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5. 소결

-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농가는 사업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총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사업외소득이 농가소득 중 가장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 결과는 농가소득이 증가하여 농가소비 증가-농가 후생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농업소득의 변동성을 감소하기 위해 ①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업수입보험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② 농작물 재해보험의 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하거나, ③ 캐나다 농업투자계정(AgriInvest)처럼 농가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적립(적립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칭하여 추가적립하는 구조임)하고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의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3분위 가구의 경우 소비 증가를 유발하는 소득원천이 다양하며, 소득유형별 한계소비성향도 높음. 그중에서 공적이전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높음.
 -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소득-소비로 이어지는 민감성이 4~5분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3분위 가구가 소득-소비 균형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평균적으로 3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총소비지출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농가소득 정체기에 적자 가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가 3분위에 많이 포진하고 있음.
 - 농가의 가계부채 누적의 문제는 단순히 '가구' 단위 가구원의 삶의 질 문제를 넘어서서 '부채 누적-새로운 소득 활동 탐색-영농 규모 및 농업 투자 축

소-농업 축소'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유찬희 외, 2020).

- 따라서 3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로의 전환-가계부채 누적'의 고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업에 계속 잔류할 수 있게 하면서도 소비 증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 중요함.
- 장기적으로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통해 소득원천을 다각화하여 연간소득의 절대적인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연중 소득의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²⁵⁾

○ 가치분소득-소비의 불균형이 심한 1분위 가구의 경우 부채의 증가를 통해서 필요한 소비를 충당하고 있음.

- 평균적인 가치분소득의 절대적인 규모와 농가소득 유형별 비율, 연령 등의 특징을 감안해 봤을 때 1분위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득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농업정책보다는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유찬희 외, 2020).
-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을 통해서 소득-소비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를 통해 매월 일정한 생계비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규모농가 직불금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²⁵⁾ 콩 재배와 된장 공장 및 체험형 민박을 함께 운영하는 한00(70대)와 윤00(60대) 부부는 여름철 소득은 체험형 민박을 통해서, 겨울철 소득은 된장 판매를 통해서 보전하고 있다고 함. 또한, 문화해설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윤00(60대)은 지역 방문 여행객 대상으로 부정기적이지만 문화해설을 진행하여 일부 소득을 보전함. 소득 활동이 연중 특정 월에 치우치지 않는 현 상태를 구축하기까지 귀농·귀촌 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소득-소비-부채 상환의 균형점을 찾았으며, 따라서 현재는 농가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함(인터뷰 일자: 2023. 6. 2.).

제5장

요약 및 결론



5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 소득-소비 간의 관계성을 고찰하여 ‘농가소득 증대-농가소비 증가’라는 경로를 통해 농가의 후생 증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집단에 어떤 정책이 유효한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농가경제조사 2013~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 소득·소비 및 평균소비성향 추이를 분석하고, 2013년 패널을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소득유형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을 도출하였음.
- 2013~2021년 동안에 농가소득과 가처분소득은 증가하였으나 모든 소득분위에서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였음. 이는 농가소득의 증가가 농가소비의 증가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농가소득 증대 정책이 농가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비성향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농가부채 및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을 둘러싼 불확실성

을 제거하여 농가소득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평균소비성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산물 가격의 현실화 및 안정화, 소비자가 선호하는 작물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농산물 판로 지원 및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등 농업수입 증대 및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정책이 요구됨.

○ 한계소비성향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소득인 공적이전소득과 사업외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크며, 변동성이 큰 농업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낮게 추정되었음.

- 농가의 고유성을 살리면서도 농가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농업소득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업 외연의 확대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의 절대적 규모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3분위 가구가 소득유형에 관계없이 소득 증가를 소비 증가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가장 컸으며, 양극단으로 갈수록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유형의 수는 작아지고 한계소비성향 또한 작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저소득분위의 경우 낮은 가처분소득(농가소득)으로 인해 필요한 소비지출을 소득만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고소득분위 경우 경제적 잉여를 남기나 미래의 불확실성 및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예비적 저축에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소비가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저소득분위에 속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소규모농가 직불금제도 등을 강화함으로써 소득-소비의 불균형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분석에서 제외된 1인 가구에서 소규모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농촌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정책 강화가 요구됨.
- 고소득분위의 경우, 농업소득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농업수입보험 확대 및 농작물 재해보험의 강화 등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2. 연구의 한계

○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 농가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분석의 연계성을 위해서 1인 가구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본 연구를 통해 농가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5년 단위로 표본이 바뀌는 농가경제조사 특성으로 인해 주요 변수의 패널 간 격차가 존재하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겹치면서 전체 변화분 중 어디까지가 표본 변경의 효과이고, 어디까지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효과인지 명료하지 않음.
- 분석기간이 짧다는 점과 횡단면 가중치의 산술평균값을 이용해서 패널분석을 했다는 점으로 인해 추정치의 정확성에 다소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연구내용 측면에서는 소득유형별 한계투자성향 분석 및 농가의 소비·투자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농가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도 기능하기 때문에 농가의 후생 극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농가소득과 소비·투자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임.

- 분석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동패널처럼 농가단위의 긴 패널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농가경제조사가 5년 단위로 표본을 변경하는 이유는 농가 모집단 변경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농가의 특성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본 변경이 바람직할 수 있음(김미복, 박성재, 2014). 그러나 동일 농가의 소득-소비-투자 활동에 대한 동태적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패널 구축이 요구됨.

부 록

부표

〈부표 1〉 공익증진직불법(2020) 전후의 농업직불제도

공익증진직불법 이전			공익증진직불법에 의한 개편	
종류	근거법			
쌀 고정직불	농업소득보전법	⇒	기본직불	소농직불(정액)
쌀 변동직불				면적직불(역진적)
발농업직불				
발농업직불(논 이모작)	WTO 특별법, 시행규정			
조건불리지역직불				
친환경농업직불	WTO 특별법, 시행규정	⇒	선택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축산직불				친환경축산직불
경관보전직불				경관보전직불
경영이양직불 ¹⁾	WTO 특별법, 시행규정	⇒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 /폐업지원직불 ²⁾	FTA 특별법		FTA피해보전 /폐업지원직불	

주 1) 고령인 은퇴농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2) FTA 협정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고, 협정 이행으로 인한 특정 품목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자료: 김태훈 외(2020, pp.79-80, 82).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2〉 소득분위별 농가부채 추이

단위: 만 원, %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3	1,769	982	1,374	1,376	3,600
2014	1,833	835	1,054	1,809	3,634
2015	1,550	874	1,244	1,333	3,874
2016	1,862	890	1,265	1,664	3,210
2017	1,982	731	1,018	1,337	3,388
2018	2,878	1,049	1,370	1,740	3,593
2019	3,115	1,076	1,187	1,739	4,256
2020	2,897	1,284	1,611	1,824	4,130
2021	2,945	1,256	1,403	1,723	3,747
증감폭	1,176	275	30	347	147
증가율	6.58%	3.13%	0.27%	2.85%	0.50%

주: 2인 이상의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모두 소비자물가지수 (2020 = 100)로 실질화한 값임. 또한, 가구원 수(N)를 이용하여 균등화한 값을 이용하였음(균등화 지수 = \sqrt{N}).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3〉 소득유형별 필수재·선택재 소비지출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변수	필수재 소비지출	선택재 소비지출
농가소득		
농업소득	0.006 (0.004)	0.003 (0.006)
겸업소득	-0.001 (0.008)	0.004 (0.020)
사업외소득	0.007 (0.010)	0.085*** (0.017)
공적이전소득	0.002 (0.012)	0.007 (0.020)
사적이전소득	0.082* (0.047)	0.023 (0.080)
자산 변동액	0.000 (0.001)	0.000 (0.002)
부채 변동액	-0.000 (0.002)	-0.003 (0.005)
표본 수	6,972	6,972
가구 수	1,743	1,743

주 1) 농가와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결과로,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표준오차를 나타냄.

2) 유의수준: *** p<0.01, ** p<0.05, * p<0.1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 소득유형별 적자·흑자 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변수	적자 가구			잉여 가구		
	총소비	필수재	선택재	총소비	필수재	선택재
농가소득						
농업소득	0.057* (0.031)	0.022 (0.016)	0.027 (0.025)	0.033** (0.014)	0.022** (0.009)	0.008 (0.008)
겸업소득	-0.112 (0.102)	-0.109 (0.081)	0.007 (0.097)	0.109*** (0.037)	0.035** (0.017)	0.065** (0.030)
사업외소득	0.267* (0.151)	0.093 (0.070)	0.129 (0.089)	0.089*** (0.030)	0.010 (0.014)	0.058** (0.026)
공적이전소득	0.058 (0.179)	0.062 (0.088)	-0.001 (0.132)	0.019 (0.054)	0.010 (0.022)	-0.013 (0.039)
사적이전소득	0.246*** (0.071)	0.181** (0.070)	0.256*** (0.062)	0.118 (0.163)	0.139 (0.090)	0.006 (0.089)
자산 변동액	-0.002 (0.005)	0.004** (0.002)	-0.006 (0.004)	-0.004 (0.004)	0.001 (0.002)	-0.004 (0.003)
부채 변동액	0.018* (0.010)	0.004 (0.005)	0.014 (0.008)	-0.007 (0.007)	-0.005 (0.004)	-0.002 (0.005)
표본 수	832	832	832	1,872	1,872	1,872
가구 수	208	208	208	468	468	468

주 1) 분석대상인 1,743개 농가 중에서 5개년 동안 계속해서 연도별 가치분소득이 연도별 총소비지출보다 적었던 가구를 적자 가구(208개 농가)로, 연도별 가치분소득이 연도별 총소비지출보다 많았던 가구를 흑자 가구(468개 농가)로 분류하였음.

2) 농가와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결과로,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표준오차를 나타냄.

3) 유의수준: *** p<0.01, ** p<0.05, * p<0.1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5〉 소득분위별·소득유형별 필수재·선택재 소비지출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구분	변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필수재						
필수재 소비 지출	농가소득					
	농업소득	0.008 (0.008)	0.047*** (0.016)	0.020* (0.011)	0.025** (0.012)	0.004 (0.005)
	겸업소득	-0.017 (0.016)	-0.050* (0.027)	0.037 (0.029)	-0.001 (0.024)	0.005 (0.009)
	사업외소득	-0.006 (0.028)	0.021 (0.036)	0.034* (0.020)	0.017 (0.018)	0.001 (0.014)
	공적이전소득	0.003 (0.041)	0.100 (0.092)	0.132** (0.056)	0.045 (0.033)	-0.013 (0.013)
	사적이전소득	0.079 (0.102)	0.098 (0.085)	0.068 (0.080)	0.113*** (0.043)	0.083 (0.126)
자산 변동액	0.003*** (0.001)	-0.007** (0.003)	-0.000 (0.002)	-0.000 (0.004)	0.001 (0.002)	
부채 변동액	0.008** (0.004)	0.008 (0.005)	-0.002 (0.004)	0.001 (0.005)	-0.005 (0.004)	
선택재						
선택재 소비 지출	농가소득					
	농업소득	-0.008 (0.009)	-0.016 (0.011)	0.001 (0.011)	0.019 (0.012)	0.003 (0.007)
	겸업소득	-0.431** (0.176)	0.074*** (0.025)	0.054 (0.059)	0.084** (0.039)	0.011 (0.019)
	사업외소득	0.059 (0.038)	0.093*** (0.028)	0.088*** (0.027)	0.105*** (0.034)	0.083*** (0.027)
	공적이전소득	0.012 (0.061)	0.050 (0.080)	0.158** (0.069)	0.036 (0.058)	-0.006 (0.021)
	사적이전소득	0.115 (0.101)	0.118 (0.082)	0.114 (0.070)	-0.214 (0.147)	-0.095 (0.144)
자산 변동액	-0.002 (0.002)	0.001 (0.004)	0.002 (0.004)	-0.005 (0.007)	0.004 (0.005)	
부채 변동액	0.013* (0.007)	0.007 (0.011)	0.008 (0.008)	0.005 (0.009)	-0.017* (0.009)	
표본 수	1,448	1,320	1,412	1,404	1,388	
가구 수	362	330	353	351	347	

주 1) 소비지출별, 소득분위별로 각각 회귀분석하여 도출한 추정치임.

2) 농가와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결과로,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표준오차를 나타냄.

3) 유의수준: *** p<0.01, ** p<0.05, * p<0.1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참고문헌

- 김대일. (2007). “불평등도 지표로서의 소득과 소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제30권 제3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미복, 박성재. (2014).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제9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용, 이계인. (2002). 농가의 소비지출구조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김태곤, 강혜정. (200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훈, 유찬희, 김종인. (2020). “공익직불제 어떻게 개편되나?” 농업전망 2020. 제2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노용환. (2021). “한계소비성향 추정을 통한 이전지출의 소비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41권 제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연정, 강동우, 정성미. (2019). 소비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 신관호, 주원. (2002). “소득불확실성이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효과.” 경제분석. 제8권 제1호. 한국은행.
- 오내원, 김은순. (2001). “농외소득의 실태와 정책 방향.” 농촌경제. 제24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찬희, 김윤진, 김창호. (2020). “유형별 농가경제 실태와 이행 경로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제27권 제1호. 한국농촌지도학회
- 장인성. (2019). 낙수효과의 측정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 정선화, 강혜정. (2015). “한국 농가의 소득원별 한계소비성향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6권 제1호.
-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7). “소비 요인별 분해를 통해 본 최근 소비지출 특징 - 평균소비성향 복원이 소비 개선의 핵심.”
- 홍기석, 박소민. (2021).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한계소비성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 Friedman, M. (1957).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uznets, S. (1946). “National Income: A Summary of Findings.” NBER, Arno Press: New York.

- Langemeier, R.M. & F.G. Patrick. (1990). "Farmers' Propensity to Consume: An Application to Illinois Grain Farm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2(2).
- Meyer, B.D. & J.X. Sullivan. (2017). "Consump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U.S. Since the 1960s." NBER working paper No. 23655.
- Sand, R. (2002). "The Propensity to Consume Income from Different Sources and Implications for Saving: an Application to Norwegian Farm Households."
- Wooldridge, J.M. (2010). "Basic Linear Unobserved Effects Panel Data Models."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The MIT Press.

〈인터뷰〉

- 이OO(수도작 재배자). (2023. 5. 30.). 나주시 관정동.
- 이OO(수도작 및 발작물 재배자). (2023. 5. 30.). 나주시 관정동.
- 김OO(배 농장 운영자). (2023. 6. 1.). 나주시 빛가람동.
- 윤OO(콩 재배자 및 된장 공장, 체험형 민박 운영자). (2023. 6. 2.). 나주시 산포면.
- 한OO(콩 재배자 및 된장 공장, 체험형 민박 운영자). (2023. 6. 2.). 나주시 산포면.

KREI

www.krei.re.kr

농가의 소득구조 및 소비성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